

# 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재원\*

## 1. 서론

1980년대 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소위 ‘시민사회의 재발견’ 논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서구사회에서의 신사회 운동과 비중심부 지역 개발국가들에서의 재민주화 뿐 아니라,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인해 촉발된 논의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의 반명제로서 시민사회의 강화가 사회주의 운동의 대안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이후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중동부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에 이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일제히 체제전환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들 국가에서의 체제전환은 정치적 측면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중적 전환 과정이었지만,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류적 연구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광의의 ‘민주화 이행’으로 규정, 여타 지역에서의 민주화 과정들 간, 그리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 간의 비교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 체제전환 이후 10 여년이 지나면서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서로 매우 다른 체제전환의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 달성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가들은 발달된 시민사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입각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체제전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러시아학과 조교수.

인정되며, 체제전환 과정 초기에 만들어진 세력 관계 및 구도, 정치적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를 체제전환 국가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구체제 지배 세력에 반대했던 시민사회 세력은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은 왜곡되거나 지체, 혹은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의 상호연관성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해게모니 하에서 주도되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펼쳐져 왔던 ‘민주주의와 시장’의 확장,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의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도 상당히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먼저 세계적 행위자로 등장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NGO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해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시민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의 계기가 바로 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붕괴 과정에서 비롯된 ‘시민사회의 재발견’이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국가-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없다는 명제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확장과 그 안에서의 중심부 국가와 자본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의도를 논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격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는 자칫 현실을 파악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러시아 시민사회의 보편적 특징과 특수한 경로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러시아 시민사회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한다.

## 2. 탈사회주의 러시아 시민사회를 둘러싼 맹점들: 보편적 이론과 러시아적 현실

소련 붕괴 이후 소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 탈사회주의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재출현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논의는 체제전환 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파탄과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의 미발달,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의 간섭과 견제 속 지원 등과 같은 조건들로 인해 비관적인 논의로 바뀌게 되었다. 많은 논자들은 서구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시키는 전략은 사실상 러시아와 같은 비서구 국가들의 권력을 후퇴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촉진하며, 시민 다수의 정책 참여를 배제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비서구 지역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담론은 권위주의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악용되곤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푸틴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정권은 러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일련의 학자들의 주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포섭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서구와의 연결지점들을 끄집어내어 서구 주도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촉진 프로그램의 본질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시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2.1 러시아 국가-시민사회 관계: 러시아적 특수성?

198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옛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표현 방식으로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Garton-Ash 1990; Gellner 199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서유럽 학계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Foley and Edwards 1998; Ost 1990; Habermas 198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형태의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 러시아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며, 그 자체에 크게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Baglione and Clark 1998; Henry 2006; Holland 2004; Sperling 1999; Sundstrom 2002, Taylor 2006).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시민사회를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던 이행론자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 형성 및 발전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민주화는 더욱 공고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 주제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 만들기가 말로 그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서구 사회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Habermas 1989).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란 ‘일상적인 소비 및 여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자 정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계급 혹은 경제사회와 구분되는 비계급적 영역 혹은 경제 외적 영역이자 동시에 국가와도 구분되는 영역으로서 국가에 대응하는 측면과 경제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된다(유팔무·김호기 1995). 그러나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영역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한 편으로는 국가에 의해, 다른 한 편으로는 계급적 경제사회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권력과 영향력 행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통제하며, 계급적 경제사회는 경제적 힘의 행사를 통해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원천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정당성이나 여론이 형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여론을 벗어난 국가의 권력행사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보여 왔다. 즉 시민사회는 지배 계급과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계급적 지배와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에 고통받는 계급들의 저항의지가 표출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매우 불안정한 민주화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등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치적 민주화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신광영 1994).

탈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명제는 적용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적 사회조직의 발전 정도가 탈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사회의 힘이 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은 모두 발달된 정당 체제와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 하고 후퇴한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시민사회의 발달이 결여되어 있었다(강윤희 2012).

심지어 일각에서는 탈공산주의 체제변동을 추동한 것은 바로 시민사회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붕괴 이전의 자율적인 사회의 존재 여부와 체제 변동 협상 과정에서의 사회 세력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체제전환 이후 이들 국가에서의 소위 민주화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는 나는 이유는 각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클수록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지체되거나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Gill 2002). 이렇듯,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델을 제공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국가와 시장 간에 위치한 중재적 영역으로 정의되어진다(Kuchukeeva and O'Loughlin 2003).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 국가-사회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적 모델은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Vorontsova and Filatov 1997).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민사회 공간의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현실에서의 국가는 사회 공간을 규정하는 조절 기제와 법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시민권 등을 통해 사회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NGO단체들과 같은 시민사회영역의 행위자들이 국가를 감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주요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재자로서,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변화는 전 세계 보편적인 담론이 아니라, 서구 복지 국가의 팽창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

가의 사회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NGO들이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시민사회의 예산 중 약 12%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각 국가 정부들은 국가 펀드 중 약 35% 정도를 시민사회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국가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감독과 같은 메커니즘 등을 통해 시민사회 통제, 간섭 강화를 합리화하게 된다(Bloodgood 2010).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접근법은 서구 복지 국가에서와는 다른 맥락일지는 몰라도,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연구에도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러시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시민사회를 사적 영역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간적 현상 혹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적이고 자기조직적인 영역 등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별을 강조하는 서구식 해석과는 달리, 시민사회를 개개인들의 통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영기업과 같이 소유권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했으며, 사회라는 용어도 공동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러시아에서 국가는 항상 러시아 국가 경제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영기업, 토지, 삼림 등과 관련하여 특수한 재산권을 행사해 왔다. 특히 시민 사회에 관한 러시아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러시아적 이해방식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국가는 반드시 법치 국가(law-governed state)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법치 국가를 약화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국가를 보완하고 심지어는 완성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Diamond 1997).

이보다 더 러시아의 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 그리고 법과 질서의 수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정의와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맥락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국가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시민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주의적인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통해 국가는 시민 사회와 민족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Черниловский 1992).

이러한 원인들 중 핵심적인 것으로 소련의 유산, 새로운 민주주의적 구조

들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체제 전환의 결과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분출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향수 등과 같은 원인들을 들기도 한다(Dowley and Silver 2002; Luong and Weinthal 1999; Mishler and Rose 1997; Munroe 2006; Sapsford and Abbott 2006; Sil and Chen 2004). 특히 소련의 유산은 여전히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회의 구조 뿐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운동이나 여타의 시민 사회 조직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비에트 시민사회를 역사적으로 허약하고 억압받는 영역으로, 때로는 심지어 제거된 영역으로 규정해 오기도 했다(Nichols 1996; Osgood and Ong 2001; Woolcock 1998; Kennedy et al. 1998).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소비에트 시민사회는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제도화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들이 가령 스포츠 클럽이나 사회적 모임들과 같은 가정 외 상호작용을 했던 제도들을 국가가 제공해 주었지만, 이러한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들의 구성원들은 자율적이지 않았다는 데에서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Rose 1995).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억압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제도화된 시민 공간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친구나 친족들 혹은 가정 바깥에서의 사적인 연결망 등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하는 풍토를 만연케 했다(Howard 2002). 그러나 다른 비중심부 저개발국가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 시민사회 조직들 자체는 제도화되어 인정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을 갖는다.

소련 붕괴 이후 시민 개개인들이 급증한 범죄, 실업, 빈곤화,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등의 축소,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의 증대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비에트 레짐의 붕괴에 대한 환호는 곧바로 좌절과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Dowley and Silver 2002; Zaslavskaya 2006). 동시에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계급으로 변신한 구 소련 엘리트들에 대해 환멸을 느낀 평범한 시민들은 소위 ‘새로운’ 엘리트들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Hanson 1997; Linz and Krueger 1996).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한층 더 국가나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개인 네트워크에 원조를 기대하며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시민사회가 여전히 허약하고 파편화되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결국 1989년도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이러한 경향을 확고하게

만들었고,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모호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민주화’ 혁명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고, 시민 사회라는 개념은 모호해져 이제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대안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시민운동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보다 낡은 사회주의 체제의 파괴에만 집중했으며,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시민 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구 사회주의 체제의 파괴를 지향했을 뿐,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계획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더뎠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한 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낙관적 희망은 사라져갔고,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이상으로 이해되었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러시아 학계에서의 논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러시아 학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상황, 중산층의 부재, 민족 문제, 상호소통적 정치문화의 결여, 권위주의의 유산과 같은 후견주의적 행태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의 비연결성 등등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허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상적인 시민 사회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Полохало 1999; Рыбкина 1997).

한편 다소 추상적인 시민사회론이 국가 권력과 대립하는 영역이라는 면이 강조되는 반면, 실질적 활동 주체인 NGO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NGO 단체들의 자율성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국가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NGO관련 연구들은 NGO 단체들의 규모와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금전적 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음을 밝혀냈다(Salamon, Sokolowski, and List 2003).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는 법을 통해 이러한 영역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용역 프로그램 펀드나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이상적인 시민사회는 형성, 발전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시민사회 발전의 질곡에는 경제적 파탄, 중산층의 부재, 민족 문제, 정치 문화의 후진성, 그리고 사회주의적 유산으로서의 가부장적 후견주의 문화 등등 수많은 원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탈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허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상적인 시민 사회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 점차로 러시아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러시아에서 서구식 시민사회를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어에서의 ‘공공영역’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자조와 시민권보호와 같은 공공 영역의 존재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Дахин 1994; Дилигенский 1997; Хлопин 1997; Левин 1997). 물론 이러한 러시아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회 운동을 질식시키고 있는 다양한 국가 주도적 시도들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Machleder 2006).

위에서 논의한 국가 일반에 대한 것 외에도 정치정당의 발전이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사회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시민사회로부터의 대표성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즉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반대로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념 등을 반영하고, 대변하여 국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적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들의 제도화는 한 국가 내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 정당은 선거를 통한 의회 내 의석 확보나 내각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정당을 결성하고 선거 경쟁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를 민주화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정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이익과 이해를 반영하고, 대중적 정치 참여를 위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념적 다양성을 조직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사회는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 권력의 억압성과 반민주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정당들은 국가에 종속되어 통제되어 온 것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결 구조가 거의

없어 시민사회로부터의 통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러시아에서는 아직 정치 정당은 시민사회의 효율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치 정당들은 시민사회와 접합된 계급이나 이념, 정책에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권력 정당(*party of power*)’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엘친과 푸틴 모두 그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정부 내각 각료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다수당으로부터 충원되지 않는 등 이러한 소위 ‘권력 정당’은 탈소비에트 러시아 정치 발전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Knox et al. 2006).

‘권력 정당’이 ‘집권 여당(*ruling party*)’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정당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은 행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익이 정당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당 자체도 정치 엘리트들과 관료 지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해야 할 영역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McGrath 2003). 더욱이 이러한 정부 기관의 장들은 KGB나 그 후신 기관인 FSB 등 다양한 국가 안보 기관 출신들로 임명되고 있는 등 행위자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2.2 해외 원조(*foreign-sponsored*) 시민사회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근 신자유주의 시대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비(Harvey)에 의하면, NGO의 성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이뤄졌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NGO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해 왔지만, 상당수의 NGO들은 이에 맞서기보다 회피 혹은 순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NGO의 관심사인 보편적 인권과 개인 주권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의제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관 속으로 흡수돼 국가 개입의 범위를 제한했다. ‘NGO에 의한 사유화’를 통해 국가 영역의 축소가 가속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NGO가 정부를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자유

주의화의 일부분이 되었다(Harvey 2007).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페트라스(Petras)는 NGO가 급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엘리트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진적 운동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NGO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탈정치화, 탈동원화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국제 NGO 활동가들의 역할이란 국제 기금으로부터 용역 자금을 확보해낼 수 있는 제안서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Petras and Veltmeyer 2001).

이렇듯 NGO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체제전환 당시 찬양일변도였던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모든 종류의 개혁에 관한 비판적 평가가 진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산층 창출과 건전한 시민사회’ 건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기에 이를 주도하는 그 어떠한 행위 주체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급진적 개혁’이나 ‘충격 요법’이라는 용어로 그 본질이 가려졌고, 경제발전과 각종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국제금융기구들과 각 국가의 원조 기관들,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NGO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 1980년대 체제전환 당시는 물론 최근의 NGO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 시대에 사회의 저항세력들은 사회주의 레짐(regime)에 저항하는 것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제 3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발 프로젝트와 접합될 수밖에 없었다(Ost 1990). 이 프로젝트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적 참여’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는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시장 근본주의와도 연결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Robinson 1993; Blair 1997). 일부 학자들은 특히 시민사회와 그 주요 행위자인 NGO를 탈냉전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시스템이기도 한 초국적 거버넌스와 연결시키기도 한다(Ferguson and Gupta 2002). 특히 탈사회주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에 의해 왜곡된 합리성들과 기술들이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천착하도록 만든 일종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세계은행, IMF 등을 포함한 초국적 금융기구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 발전

은 시장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히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사회란 외부로부터 이식되어진 측면이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시민 사회라는 개념은 특히 사유화 원조와 연관되어 있던 서유럽의 동유럽 원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다(Hann and Dunn 1996). 199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이론이라는 양 축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하기까지 했다(Hulme and Edwards 1997; Robinson 1993).

신자유주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둘러싼 문제는 진지한 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과 원조의 영향력에 주목해 왔다(Crotty 2003; Knox et al. 2006).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학자들은 NGO들이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 건설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해외 펀딩,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그것은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 건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Cook and Vinogradova 2006; Sundstrom 2002).

소련 시기 소위 시민단체로 선전되었던 수많은 모조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과 소련 붕괴 이후 극심해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자국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따라서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러시아 NGO들은 해외로부터의 각종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해외 의존적 구조는 결국 NGO의 자생력을 약화시켰고, 러시아 NGO단체들은 자국 내 시민 회원들의 확충보다는 해외 기관들에서 공고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기반한 NGO 사업은 종종 현지 사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화되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종종 현지의 환경이나 문화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기금 조직들은 이미 확립된 자신들만의 사회적 이상만을 좇을 뿐, 서구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 하는 각 국가의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rothers 1999; Howard 2002; Ottaway and Chung 1999).

해외로부터의 원조 기금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풀뿌리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 NGO 단체들에 제공되는 것으로 선전되어져 왔고, 따라서

서구 국가들, 서구 NGO,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실제로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하에 이러한 협력과 원조는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92년에서 1998년 동안 USAID(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NGO 지원 프로젝트에만 무려 9천 2백만 달러를 지원했다(Petter 1997). 그 외 소로스 재단, 맥아더 재단, 그리고 포드 재단 등 수많은 민간 재단들도 러시아의 시민사회영역에 수많은 용역 프로젝트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풀뿌리 시민사회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Richter 2009, Hemment 2004).

무엇보다 이러한 NGO 들은 인권, 양성평등, 그리고 환경 이슈 등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심각한 수준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던 당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주제들이었다. 실업과 빈곤, 자살과 사망률의 급증, 공공 의료를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 제도들의 붕괴와 같은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를 위한 캠페인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갖지 못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서구의 후원 단체들은 러시아 현지의 국내 NGO들의 요구에 자신들의 금전적 후원의 목적을 맞추기보다는 자국의 납세자들과 후원자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Mendelson and Glenn 2002; Sperling 1999). 또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지원은 단기적 사업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 목표 하의 계획 수립 및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NGO 활동도 점차로 모종의 사업화되어 NGO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점차로 ‘오지’에서의 단기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전문가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었다(Lumsdaine 1993; Smith 1990).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들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전혀 다른 분야와 전혀 다른 국가에서의 프로젝트로 옮기는 등 점차로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서구의 지원을 받는 NGO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목적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를, 그리고 국제관계적 측면에서는 소위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을 희생할 요구하고는 미국의 헤게모니 하

에 추동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금과 단체들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NATO의 동진이나 MD 시스템의 폴란드와 체코 설치 문제, 그리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주화 혁명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이들 국제 단체들과 기금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서구나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NGO들의 입지는 한층 더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곤 했다.<sup>1)</sup>

시민사회의 발전은 탈사회주의 사회의 발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체제 전환의 과정 속에서 구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중산층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도 우파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까지도 옹호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국면은 곧바로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 혹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 의해 강력히 추동되었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한 편으로는 러시아 시민사회를 그러한 체제에 종속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권위주의 국가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과 변화

20세기 후반 탈산업사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조가 파편화되고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있어 그 경계를 비정형적이고 신축성 있게 보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사회경계의 명확성이 희석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 시대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기 시대의 시민사회와는 달리,

1)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한 푸틴 정부는 러시아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는데, 이러한 애국주의적 선동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입각한 인종혐오주의 단체들의 급증을 야기했다. 푸틴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방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불만은 국내의 소수민족들이나 이민자들에게로 향하기도 했다.

오히려 국가와 공존, 협력 관계에 있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 팽창을 거듭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 논리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증대된 시민사회의 복잡성에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원활한 시장질서와 자본 활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민사회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NGO 활동의 활성화는 시장에 기능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는 시장에 대해 감시와 저항, 견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순응성’을 갖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유팔무·김호기 1995).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NGO의 국경을 넘는 팽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NGO는 세계화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NGO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적합성을 가진 순응적인 시민사회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자본과 시장은 무제한적인 이윤의 논리와 극한적 경쟁의 논리로 인해 사회를 질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NGO의 확대는 사회의 회생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팽창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NGO 질서의 구축은 세계자본주의의 정당화를 확보해 주고 있다. 특히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저항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론의 소통 영역인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사회구성의 핵심적 영역으로 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서구 중심부 국가의 사회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NGO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현실 사회주의의 변혁 및 붕괴, 그리고 비중심부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는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운동이 점차 시민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저항의 진지로서의 시민사회는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민단체, NGO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경향은 변화의 중심이었던 러시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 3.1. 소련 말기와 열친 시기: 시민사회의 태동과 불안정한 발전, 그리고 제도화

소련 체제에 반대한 맹아적 형태의 시민사회 세력은 민주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지 못 했는데, 바로 이러한 한계가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왜곡하거나 저해했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구 체제의 붕괴 과정이 이후 탈 사회주의 체제 이행 경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체제 전환 이전 구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붕괴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구 체제의 붕괴 과정은 공식적으로 붕괴를 선언하기 훨씬 전인 구 소련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르러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존재하던 자발적 결사체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이후 소련 사회에서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소위 ‘시민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사회에서 존재했던 소년, 청년, 여성, 환경, 문학, 예술인 단체 등은 공산당의 통제 하에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던 조직으로 자율성과 자발성 등에 있어서 서구의 그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들에서 정체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 소위 ‘반체제 운동’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조직들의 운동은 소수 지식인들의 운동으로 존재했을 뿐,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지 못 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상징되는 개방화와 자유화 조치들은 사회에 대한 통제를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소련 사회에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부활하는 계기가 되어 소위 ‘비공식 집단’이라는 시민사회조직들의 맹아적 형태들의 탄생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비공식 집단들은 전 소련적으로 확산되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이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6만 여 개로 증가하였는데, 전환기적 특징 상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원시적 정당이나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활동 영역에 따라 많은 비공식집단들은 대중적 정당이나 사회운동단체로 진화하기 보다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중심의 모임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배정한 2006).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집단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조직들은 단순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갖춘 시민사회조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으며, 이후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맹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화된 비공식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주축이 됨으로써 정치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1989년 소련 최초의 복수 후보 선거였던 연방 인민대표자회의 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다수의 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각 공화국 단위에서는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전선체인 ‘인민전선’을 주도하였고,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거의 모두 ‘민주 러시아’라는 선거블록으로 출마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사회조직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론적으로 소련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어도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지역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에서와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이들 조직들은 시민사회의 맹아로서는 존재했지만, 체제전환을 직접 추동하고 주도할만한 역량을 갖지 못 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세력들이 아닌 각 공화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체제전환을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체제전환의 성공은 물론 시민사회의 발전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1년 러시아 연방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으로 대변되는 개혁파 정치 엘리트는 민주 러시아의 도움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집권 이후 두 세력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 했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 선출 문제, 보수파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두 세력은 갈등을 빚었는데, 급진 개혁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러시아 관구로 파견할 대통령 대리인들에 민주러시아 소속 인사가 한 명도 선출되지 못 함으로써 갈등은 절정에 달하였다(Urban 1992). 이후 소련 연방 해체 결정 과정에서 해체에 반대하던 민주러시아 내 분파들이 탈퇴하는 등 일련의 상황들은 옐친과의 관계 악화 뿐 아니라, 민주러시아 조직 자체의 세력 약화로 이어졌다(배정한 2006).

이렇듯 민주러시아로 대변되는 민주적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가 약화되자 옐친은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구 노멘클라투라 일부를 자신의 정치적 동맹 세력화하는 등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했다. 따라서 소련이 붕괴할 당시 이미 러시아에서의 반체제 혹은 반공산 세력은 허약해진 상태였으며, 이들보다는 개혁파 노멘클라투라 세력이 체제전환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강력한 시민사회 세력이 지지하는 반공산 정치 세력이 공산당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전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 세력이 체제전환을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체제 전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세력은 정치경제적 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소련 체제의 붕괴는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중적 체제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의 재등장으로 인한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의미하는 총체적 전환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연방 해체와 새로운 독립 국가의 등장이라는 국가의 재건설과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는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총체적 혼란은 러시아에서의 향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건설을 저해했다.

특히 중심부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금융화된 체제의 이식은 러시아에도 철저히 이루어졌다. 국제금융자본은 급격한 시장경제 도입은 물론 그를 위한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특히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을 창출하여 자신의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은 사유화와 국제자본의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세계은행과 IMF는 물론 EU, USAID 등 수많은 신자유주의 추동 기구들은 앞 다투어 사유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초국적 금융 자본들을 위한 법과 제도들 만들었으며, 몰락해 가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부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서구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자유화, 거시 경제적 안정화, 사유화, 탈규제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 패키지를 적극 도입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혼란기 옐친 시기의 국가는 금융산업그룹으로 대변되는 신흥 자본가들과의 관계나 지방 세력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국가능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체제전환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극심한 경제 침체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로 인해 소련 붕괴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적극성, 주체성 등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사회운동은 쇠퇴하였다. 이는 시민단체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발전은 지체되었음을 의미했다.

1990년대에 옐친 정부는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단체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이유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에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독립적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국제 기구들과 기금들과 같은 국외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영역을 후원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옐친 정부의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약 70% 이상의 NGO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철수한 사회 복지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조직들은 소비에트 시대 국가가 주도했던 장애인, 참전군인, 연금생활자 지원 의사 시민단체들의 후신 조직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 상당수의 NGO들은 공공 아젠다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입법,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여성, 소수자 권리와 같은 서구식 *advocacy* NGO보다는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 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이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 내에서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공히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이러한 NGO들은 주로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었다(Sevortian and Barchukova 2002).

한편 1990년대 말 공식적으로 등록된 NGO 조직의 숫자는 약 35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제전환 이후 옐친 통치 기간 내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Domrin 2003). 그러나 여타의 체제전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시민사회 조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소수 활동가 중심의 조직,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저조, 횡적, 종적 연대의 부재, 그리고 취약한 재정 구조로 인한 높은 해외 재정 의존도 등의 문제로 인한 실질적 발전 지체 현상은 지속되었다(강윤희 2003, 2005; Gill 2002).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옐친 시기 시민사회가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양적 확대가 가능하게 한 시민사회가 제도화를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 약화되고, NGO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시민사회의 NGO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기 비공식 집단으로 시작된 시민사회의 맹아들이 조직적 틀을 갖추고, NGO로 발전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일정정도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일부 NGO들이 국제적 수준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고, 소규모 조직들의 연대 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특히 지방이나 지역 단위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풀뿌리 NGO들의 활동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은 시민사회의 활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정치 영역으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정치 과정으로의 시민사회 세력의 참여 또한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비록 1990년대 말에는 크게 약화되고 말았지만, 1993년 두 마 선거에 여성 단체인 ‘러시아 여성’이 의원을 선출한 바 있었고, 1999년 선거까지 세 번에 걸쳐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선거블록을 결성하고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옐친 시기 말까지 시민사회세력들의 정치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신범식 2000; 김성진 2004).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듯, 1990년대 러시아 시민사회 세력들은 소련 말기의 대중적 폭발력은 상실하면서 급속히 NGO화해서 분화되고 정치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독자적인 자율성과 자발성, 활동성을 유지해 왔으며, 일부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참여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세력이 배제되었다. 옐친 정부에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은 거의 기용된 적이 없었으며, 옐친은 시민사회세력 대신 구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정당(Party of Power)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데서 보듯, 러시아 시민사회 세력은 민주주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했던 것이다(김성진 2004).

### 3.2. 푸틴 시기: 시민사회에 대한 선택적 포섭과 배제, 조작과 탄압

푸틴이 집권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유가 폭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출 의존 경제 구조가 더욱 확고하게 된 러시아는 특별한 구조 개혁 조치 없이도 연평균 약 7% 정도의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러시아는 ‘강한 국가’의 재건을 꿈꾸게 되었는데, 특히 2기 이후 푸틴 집권 시기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아닌 그 지체, 나아가 권위주의로의 변질로 상징되는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서구와의 대립적인 상황의 격화라는 대외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를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2000년대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중간 계층의 성장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주의적 활동으로 국한되기는 했지만, 노동조합운동이 외양적으로는 크게 활성화되었고, 교사운동, 주택자산소유자 운동, 운전자 운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풀뿌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각종 노동자 집단들의 시위나 파업, 그리고 반정부 운동도 확대되었다(Cherbankova 2009; Robertson 200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NGO 단체들의 수는 푸틴 집권 2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60 여 만 개의 NGO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푸틴 시기 러시아 정부의 대 시민사회 정책은 199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달라졌는데, 권위주의적 정부는 정치 영역에 이어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억압적 관리 및 통제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사회 관계의 재편을 시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타의 권위주의 혹은 도개 정치 체제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 억압정책과는 달리, 푸틴 정부는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와 그 역할 및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는 점이다.

먼저 푸틴은 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와 압박에 착수했다. 2001년 올리가르히에 대한 공격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NTV와 ORT, 그리고 TV6에 이르기까지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2005년에는 국영 기업인 ‘가즈프롬’은 ‘Izvestiia’지를 매입하고, ‘Nezavisimaia Gazeta’지의 사실상 소유주가 되었으며, 이후 친 정부 기업인 ‘Promsviazbank’는 ‘Trud’지와 ‘Argumenty i fakty’지를 매입하였으며, 철강업계 친 정부 올리가르히인 우스마노프는 ‘Komersant’지를 매입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 영역에서의 국가 통제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인 개인들에 대한 공격은 물론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와 같은 대표적인 비판적 라디오 프로그램들도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8년에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었다.

또한 2003년에 푸틴 행정부는 러시아의 유명한 독립적인 여론 조사 기관인 VTsIOM(전 러시아 공공 여론 조사 센터)을 100% 국가 소유 기관으로 전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여론 조사 기관의 핵심적 역할인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고, 센터의 장인 유리 레바다를 해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국 학계와의 접촉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학술지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2004년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한층 더 철저히 국가에 종속적인 기관으로 변질시키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잠재적 저항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학계 및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Lipman and McFaul 2003).

이와 동시에 산업 부문 등 공적 영역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에 채택된 소위 ‘신 노동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독립성은 물론, 파업과 시위 등에 관한 권리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일련의 노동권을 크게 훼손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심각했는데, 문제는 이들 서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NGO단체들이 명확하게 서구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쉽게 권위주의적 푸틴 정부로부터 ‘주권 침해’에 동조하는 매국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2003년에서 2005년 동안에 구 소련 곳곳에서 일어났던 소위 민주화 혁명과 일부에서의 친서구적 정권으로의 레짐 교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서구 지원 민주화 촉진 NGO들의 역할은 푸틴 정권에게 있어서 공포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Richter 2009).

또한 2001년 8월에는 바로 법인 등록법을 통해 NGO단체들의 등록 및 재등록 기간을 새로 정해서 이듬해 말까지 각 단체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한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강화시켰다. 이 또한 난립해 있는 NGO단체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실제로 활동 중인 NGO들에 대한 재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일부 시민사회조직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네오나치나 스킨헤드 조직들의 활동이 극에 달했고, 국내외 이슬람 과격주의 조직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2002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소위 과격주의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과격주의 금지법은 이러한 인종주의 조직 혹은 테러리즘 집단들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이용, 마치 이들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법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권이나 환경관련 NGO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과격주의를 정의한 과격주의 조직, 행동과 같은 내용들은 매우 모호하여 법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의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이어서 2004년에 통과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역시 집회와 시위의 성격과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장 결정적인 법안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NGO 등록법’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법안이나 정책들과는 달리, 푸틴이 직접 강조했듯이, 이 법안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NGO들이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조지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소위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의 러시아로의 확산을 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들에서의 민중의 힘에 의한 정권 교체 당시 서구의 지원을 받는 NGO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에서 위협을 느낀 푸틴 정부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NGO단체들은 자금과 재산 등 재정에 관련된 것을 비롯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계획들에 대해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등록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강화했으며, 정부가 NGO 운영 등의 과정에 대한 서류 요구권은 물론 내부회의나 행사 등에 정부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직접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Machleder 2006). 러시아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외국 정부와 NGO 등의 국제사회의 항의로 인해 국제 NGO 지부 설치 금지 등 일부 과도한 조항들은 철회되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심지어는 단체의 활동 중지나 폐쇄에 이르기까지 NGO단체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Robertson 2009).

한편 푸틴 정부는 탄압 전략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포섭전략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2001년 11월에 푸틴 정부는 정부와 NGO들 간의 대화 창구를 위한 기구로서 시민 포럼(Civic Forum)을 창설하였다(Evans 2006). 푸틴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민사회는 반드시 러시아 국가의 이익과 전 러시아 국민의 발전에 복무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국가와 대립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한 전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적 자문 기구화를 꾀했으나, 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

하고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한 편으로는 정부와 대립적인 시민사회를 억압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여타의 시민사회를 국가의 통제 하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2006년 1월에 공공 의회(Public Chamber)를 설립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공공 의회는 126명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지역 단위에서도 유사한 국가-시민사회 연결 조직의 창설이 이어졌는데, 의회의 주요 업무는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조언 및 공공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것과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감독 및 시민사회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 공간이 만들어졌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확보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더라도, 푸틴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환경과 인권 분야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외되었던 데에서 보듯, 공공의회는 국가의 시민사회 포섭 전략의 일환이 가져 올 수 있는 결과,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ichter 2009).

이러한 전략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모조시민사회운동의 창출이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제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공간을 점유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대립,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지역 단위 조직인 ‘메스니예(Mestnye)’, 전국적 청년 조직인 ‘나쉬(Nashi)’, 그리고 아동들 조직인 ‘미쉬키(Mishiki)’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조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수준에서 창설되었다. 특히 색깔혁명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2005년에 전격적으로 조직된 ‘나쉬’는 전국의 2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2년 뒤에는 무려 그 회원이 12 만 여 명이 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조직임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러시아식 민주주의, 사실상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반 올리가르히적 조직이라는 의미도 이러한 푸틴 정권에 저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을 뿐, 시민사회의 경제 사회에 대한 견제와 개입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었다(Hemment 2012; Henderson 2011; Robertson 2009).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장하는 반파시스트적 조직이라는 의미는 단지 2차 대전 당시의 서유럽 파시즘이나 그 이전의 서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표면적으로 선전할 뿐, 현재의 러시아 사회의 인종주의적, 파시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체제와는 상관없이 이러



한 역사적인 서유럽의 러시아 적대 경향을 보편화하여 현재의 미국과 서구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에 서구에서는 국가가 후원하는 사회조직들로 대표되는 소위 국가조합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었다(Fish 1996; Diamond 1997). 물론 이러한 모델은 권위주의 레짐 혹은 발전국가 레짐에서 작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국가 후원 사회 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의 이익집단들을 조직, 통제, 관리, 지원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국가 후원 사회조직들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선별적 조직들은 권위주의 레짐 하에서 제한적이거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국가의 방해받지 않는 사회 조직의 자율성 방어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자유주의 야당 인사들로 충원되는 대통령실 산하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의 설립으로 가시화되기는 했던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관 조직 내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공식 직제로서 표면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결을 도모하면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시민사회 제도발전과 인권협의회’로 개명, 확대함과 동시에 인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루킨(Lukin)이 주도했던 인권 보고서는 체첸 문제나 언론의 자유, 비판적 언론인 살해 등 러시아 사회 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정치적 사안들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데에서 보듯, 이러한 기구의 역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경제 영역에서는 ‘러시아 산업가 기업가 연맹’과 같은 몇몇 친정부적 성향의 산업 및 기업 단체들을 창설하였고, 언론 영역에서는 독립적 언론인 조직인 ‘러시아 언론인 연합’에 대항하여 국가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미디어 연맹’을 창설하였으며, 소수민족과 무슬림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무프티 평의회’를 포섭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조 시민사회를 활발히 조직했다(박수현 2011). 그러나 이들 단체들 역시 국가의 외곽 조직에 불과할 뿐, 그 어떤 독립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추구하지 못 했다.

### 3.3. 상대적 사회경제적 안정화와 시민사회의 재활성화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 간에는 깊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조건의 향상만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안정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발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서유럽 사회의 경제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정성이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왔다는 경험적 연구도 이러한 가정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시민들의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때로는 저항행위도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실패하고, 권위주의적 레짐의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면서 증대되어 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정치 사회에서 러시아 공산당, 정의당, 자유민주당 등 대부분의 야당들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사회영역에서도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념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위주의적 푸틴 정부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연대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새로운 연대체 조직의 실험은 2005년 삐쩨르부르크에서 반 푸틴 시민사회단체들을 규합하여 ‘시민 반대파(Civic Opposition)’라는 전선체 조직을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합법적 야당들 뿐 아니라, 비합법 야당, 독립 노조들, 그리고 약 20 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들이 참가했는데, 바로 이러한 연대체는 후에 ‘다른 러시아(Other Russia)’와 ‘통합 시민 전선(United Civil Front)’라는 광범위한 비합법 야당 연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Robertson 2009).

이러한 정치적 조직화는 바로 푸틴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연금 현금화(monetization)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푸틴 정부의 연금의 현금화 정책에 대항하는 연금생활자들의 전국적인 도로 및 시청사 앞 점거 시위, 약 7000 여 명에 이르는 모스크바 근처 힘끼 주민들의 레닌그라드 대로 점거 시위 등은 이러한 거리 정치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스크바와 삐쩨르부르크, 스탈린그라드 등지에서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연금생활자들의 대규모 거리 점거 시위가 이어졌다

(Robertson 2009).

러시아 시민사회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노동조합이 있다.<sup>2)</sup> 같은 시기 수많은 독립 노조들의 조직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관계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파업과 시위,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의해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한 해에만 전년도 대비 파업 건 수가 무려 8배나 증가했다(Human Rights 2008).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활발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소치 올림픽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 운동’이라는 환경단체연합 조직은 법적 수단과 적극적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가즈프롬(Gazprom)이 투자한 소치 올림픽을 위한 거대한 국립 공원 조성을 좌절시킨 바 있었다(Cherbankova 2009).

이러한 고유한 사회 운동 영역에서의 성과 외에도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급증하였다. 러시아의 차량 운전자들의 연대체인 ‘러시아 운전자 전국 연합’의 주도로 운전면허 분실 시 재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사고 시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면허 관련 새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집합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중앙 조직 외에도 거의 전 러시아에 조직되어 있는 이들 지부의 활동은 러시아 교통 경찰의 부패 문제 등을 드러내는 등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사를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석유 값 인상 반대나 수입 자동차 쿼터 제한 반대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펼쳐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안정적인 일상에서의 삶을 꿈꾸는 다양한 주택 소유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운동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났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블록들의 운영이나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이들 조직들은 지역 단위에서의 거주 공간 주위의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지역 정부 당국이 자신들의

2)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의 중요 행위자 중 하나로 노동조합을 포함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각종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이익을 위한 계급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회사와 지역 사회에서 복지 등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적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무를 다 하지 못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건물들의 건축을 시도하는 등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해치는 일들에 대해 저항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직들은 관료주의적인 지역 정부 당국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다(Cherbankova 2009).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각종 법안들의 채택과 국가가 조직한 모조 시민사회단체들의 등장, 그리고 서구에 대한 적대감 조성과 같은 푸틴 정부의 일련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경제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분배 문제와 사회권을 가로막는 정치적 후진성에 대한 자각도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들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사회는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향후 푸틴의 3선 도전 과정에서의 투표 조작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푸틴 3기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선별적 억압과 수용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층 발전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 결론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국제정치기구들은 물론 국제금융자본이나 국제범죄 및 테러조직과 같은 다양한 초국적 행위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민사회론이나 국제 NGO단체들에 대한 담론도 크게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ODA로 대변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NGO 단체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구 소련 및 동유럽 제 국가들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 원조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들의 활동이 소위 ‘민주화 혁명’과 민주주의 정체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민

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NGO에 관한 많은 논쟁에 보듯, 시민사회와 그 주요 행위자인 NGO의 역할과 기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을 촉진시킨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기 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획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이념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급진적인 성격을 띠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킨다는 사실은 체제전환국가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 지구적인 확장 과정과 병행되어 온 NGO 단체들의 일국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는 초국적 활동은 여전히 국제정치적인 위계질서와 국제경제적 분업 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에 닥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대혼란은 러시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낳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와 같은 비서구 지역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자신들의 지배와 기득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푸틴 시기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서구는 러시아에 여전히 적대적일 뿐 아니라, 자원 수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 러시아인들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 권위주의 레짐 지배 엘리트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이용, 시민사회에 대한 역압을 정당화하였다.

푸틴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의 선별적 수용과 배제, 그리고 탄압과 조작 정책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델로서의 ‘서구’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로서의 ‘서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적 레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

의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개념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지지만, 동시에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적 국가-사회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러시아를 ‘억압하는’ 서구로부터 후원을 받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포섭하거나 반대로 탄압하며, 나아가 모조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조작하는 방식으로 푸틴 정권은 매우 치밀하게 시민사회의 발전을 왜곡, 저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적 레짐 하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체되고 있지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정치화된 시민사회의 저항적 성격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러시아의 시민사회의 성격은 서구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특수성이 국가의 시민사회 통제와 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건설될 수 있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의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체제전환기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그러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 NGO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비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시민사회는 반드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구의 시민사회 촉진 프로그램의 의도와 권위주의 국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재활성화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윤희(2003)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여성운동 활성화 현황과 전망: 여성 NGO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353-379.
- \_\_\_\_\_ (2005) 「러시아 환경 NGO 발전 현황과 전망: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환경 NGO의 가용 자원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45:2, 207-239.
- \_\_\_\_\_ (2012) 「러시아 체제전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 『슬라브 학보』 27:1, 181-210.
- 김성진(2004) 「세계화, 주권, 그리고 연방관계: 러시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3, 365-385.
- 박수현(2011)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회의소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269-296.
- 배정환(2006)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운동단체의 기원, 조직적 발전과 분화: 저발전 시민사회의 형성사적 기원」, 『슬라브연구』 22:1, 27-50.
- 우평균(2006) 「러시아에서의 NGO 발전과 시민사회형성: 낙관론 비판, 평가 및 전망」, 『슬라브학보』 21:2, 325-350.
- 유팔무·김호기(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신광영(1994)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아시아문화』 10, 145-180.
- 신범식(2000) 「러시아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분포와 가치체계」, 『국제정치논총』 40:3, 213-244.
- Велакулова, Е.(2001) “Концепц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м прочтении: обзор публикац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Г. Мичалева и С. Рыженков(ред.) *Граждане и власть: проблемы и подходы*, М.: Летний сад, С. 28-49.
- Голенкова, З., В. Витюк, и Ж. Гридчин(1995) “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З. Голенкова.(ред.)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и стратификация в России*, Т. 1, М.: ИС РАН, С. 13-34.
- Дахин, В.(1994) “Дуализм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России (к вопросу о влия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М.: Интерпракс, С. 51-62.
- Дилигенский, Г.(1997) “Что мы знаем о демократии и гражданском

- обществе?,” *Pro et Contra*, 2/4.
- Левин, И.(1997) “‘Политический класс’ и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М.: Интерпракс, С. 132-137.
- Полохало, В.(1999) “Не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к социополитический феномен Украины,” *Полис*, 6, С. 25-33.
- Севортиян, А. и Н. Барчукова(2002) “Некомерческий сектор и власть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М.: Charities Aid Foundation.
- Рывкина, Р.(1997) “Между этнократией и гражд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Свободная мысль*, 4, С. 81-95.
- Черниловский, З. М.(1992)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опыт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6, С. 142-151.
- Хлопин, А.(1997) “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Pro et Contra*, 2/4, С. 60-76.
- Ahl, R.(1999) “Society and Transition in Post-Soviet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2/2, pp. 175-193.
- Baglione, L. A. and C. A. Clark(1998). “The Challenge of Transforming Russian Unions: The Mining and Metallurgy Trade Union,” *Problems in Post-Communism*, 45/1, pp. 43-53.
- Belin, L.(2004) “Politics and the mass media under Putin,” in C. Ross(ed.) *Russian Politics under Puti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133-155.
- Blair, H.(1997) “Donors, Democratization and Civil Society: Relating Theory to Practice,” in D. Hulme and M. Edwards(eds.) *NGOs, States and Donors: Too Close for Comfort?*, New York: St. Martin’s Press, in association with Save the Children, pp. 23-43.
- Bloodgood, E. A.(2010) “Institutional Advocacy and the Emergence of Advocacy NGOs in the OECD,” in Aseem Prakash and Mary Kay Gugerty(eds.) *Advocacy Organizations and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1-129.
- Bovt, G.(2002) “The Russian press and civil society: Freedom of speech versus freedom of market,” in C. Marsh and N. Gvosdev(eds.) *Civil Society and the Search for Justice in Russia*, New York and Oxford: Lexington



Books, pp. 91-105.

- Carothers, T.(1999)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herbankova, E.(2009) “The Evolution of Russia's Civil Society under Vladimir Putin: A Case for Concern or Grounds for Optimism?,”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10/3, pp. 394-415.
- Cook, L. J. and E. Vinogradova(2006) “NGOs and Social Policy Making in Russia’s Regions,” *Problems of Post-Communism*, 53/5, pp. 28-41.
- Crotty, J.(2003) “Managing Civil Society: Democratiz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a Russian Region,”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36/4, pp. 489-508.
- Diamond, L.(1997) “Promoting Democracy in the 1990s: Actors, Instruments and Issues,” in Axel Hadenius(ed.) *Democracy's Victory and Crisi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pp. 311-370.
- Domrin, A. N.(2003) “Ten Years Later: Society, ‘Civil Society,’ and the Russian State,” *The Russian Review*, 62, pp. 193-211.
- Dowley, K. M. and B. D. Silver(2002) “Social Capital, Ethnicity and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Post-Communist States,” *Europe-Asia Studies*, 54/4, pp. 505-527.
- Evans, A.(2006) “Vladimir Putin’s Design for Civil Society,” in A. Evans et al.(eds.) *Russian Civil Society: A Critical Assessment*, New York: M.E. Sharpe, pp. 147-160.
- Ferguson J. and A. Gupta(2002)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29/4, November, pp. 981-1003.
- Fish, S.(1994) “Russia’s fourth transition,” in L. Diamond and M. Plattner (eds.)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Baltimore, MD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264-275.
- Foley, M and B. Edwards(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3, pp. 38-52.
- Garton-Ash, T.(1990) *The Uses of Adversity: Essays on the Fate of Central Europe*, New York: Vintage Books.

- Gellner, E.(1994) *Conditions of Liberty: Civil Society and its Rivals*, New York: Allen Lane/Penguin Press.
- Gill, G.(2002) *Democracy and Post-Communism: Political Change in the Post-Communist World*, London: Routledge.
- Habermas, J.(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 Hann, C. and E. Dunn(1996) *Civil Society: Challenging Western Model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nson, P.(1997) "Samara: A Preliminary Profile of a Russian Region and its Adaption to the Market," *Europe-Asia Studies*, 49/3, pp. 407-429.
- Harvey, D.(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 Press.
- Hemment, J.(2004) "The Riddle of the Third Sector: Civil Society, International Aid, and NGOs in Russi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2, Spring, pp. 215-241.
- \_\_\_\_\_ (2012) "Nashi, Youth Voluntarism, and Potemkin NGOs: Making Sense of Civil Society in Post-Soviet Russia," *Slavic Review*, 71/2, pp. 234-260.
- Henderson, S.(2002) "Selling Civil Society: Western Aid and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ector in Russ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2, March, pp. 71-80.
- Henry, L. A.(2006) "Shaping Social Activism in Post-Soviet Russia: Leadership,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Innovation," *Post-Soviet Affairs*, 22/2, pp. 99-124.
- Holland, M.(2004) "Chechnya's Internally Displaced and the Role of Russia's NGOs," *Journal of Refugee Studies*, 17/3, pp. 334-346.
- Howard, M. M.(2002) "The Weakness of Post-Communist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13/1, pp. 57-69.
- Hulme, D. and M. Edwards(1997) *NGOs, States and Donors: Too Close for Comfort?*, New York: St. Martin's Press, in association with Save the Children.
- Keck M. and K. Sikkink(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nnedy, B. P., I. Kawachi, and E. Brainerd(1998)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Russian Mortality Crisis,” *World Development*, 26/11, pp. 2029-2043.
- Knox, Z., P. Lentini, and B. Williams(2006) “Parties of Power and Russian Politics: A Victory of the State over Civil Society?,” *Problems of Post-Communism*, 53/1, pp. 3-14.
- Kuchukeeva, A. and J. O’Loughlin(2003) “Civic Engagement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yrgyzsta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4/8, pp. 557-87.
- Linz, S. J. and G. Krueger(1996) “Russia’s Managers in Transition: Pilferers or Paladins?,” *Post 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37/7, pp. 97-425.
- Lipman, M. and M. McFaul(2003) “Putin and the media,” in D. Herspring (ed.) *The Putin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2nd ed., New York: M. E. Sharpe, pp. 55-74.
- Lumsdaine, D. H.(1993)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 Luong, P. J. and E. Weinthal(1999) “The NGO Paradox: Democratic Goals and Non-Democratic Outcomes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51/7, pp. 1267-1284.
- Machleder, J.(2006) *Contextual and Legisl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Law on NGOs*, Discussion Paper, Moscow; INDEM Foundation.
- McGrath, T.(2003) “Russia,” in Adrian Karatnycky, Alexander Motyl, and Amanda Schnetzer(eds.) *Nations in Transit 2003: Democratization in East Central Europe and Eurasia*, New York: Freedom House.
- Mendelson, S. and J. K. Glenn(eds.)(2002) *The Power and Limits of NGOs: A Critical Look at Building Democracy in Eastern Europe and Eur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shler, W. and R. Rose(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s*, 59/2, pp. 418-451.
- Munroe, N.(2006) “Russia’s Persistent Communist Legacy: Nostalgia, Reaction and Reactionary Expectations,” *Post-Soviet Affairs*, 22/4, pp. 289-313.

- Neace, M. B.(1999) "Entrepreneurs in Emerging Economies: Creating Trust,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Annals, AAPSS*, 565, pp. 148-161.
- Nichols, T. M.(1996) "Russian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Information*, 35/4, pp. 629-642.
- Osgood, M. and B. N. Ong(2001)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Development in Marginal Communities with Reference to Post-Soviet Societies,"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1/3, pp. 205-219.
- Ost, D.(1990) *Solidarity and The Politics of Anti-Politics: Opposition and Reform in Poland since 1968*,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Ottaway, M. and T. Chung(1999) "Debating Democracy Assistance: Toward a New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4, pp. 99-103.
- Petras, J. and H. Veltmeyer(2001) *Globalization Unmaske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Zed Books.
- Petter, L.(1997) *USAID/Russia NGO Sector 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USAID/Russia, Moscow, Russia.
- Richter, J.(2009) "The Ministry of Civil Society? The Public Chambers in the Regions," *Problems of Post-Communism*, 56/6, pp. 7-20.
- Robertson, G.(2009) "Managing Society: Protest, Civil Society, and Regime in Putin's Russia," *Slavic Review*, 68/3, pp. 528-547.
- Robinson, M.(1993) "Governance, Democracy and Conditionality: NGOs and the New Policy Agenda," in A. Clayton(ed.) *Governance, Democracy and Conditionality: What Role for NGOs?*, Oxford: INTRAC.
- Rose, R.(1995) "Russia as an Hourglass Society: A Constitution without Citizens,"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4/3, pp. 34-42.
- Salamon, L. M., S. W. Sokolowski, and L. List(2003) *Global Civil Society: An Overview*,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Salmenniemi, S.(2005) "Civic Activity — Feminine Activity? Gender, Civil Society and Citizenship in Post-Soviet Russia," *Sociology*, 39/4, pp. 735-753.
- Sapsford, R. and P. Abbott(2006) "Trust, Confidence and Social Environment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39/1, pp. 59-71.

- Sil, R. and C. Chen(2004). "State Legitimacy and the (In)significance of Democracy in Post-Communist Russia," *Europe-Asia Studies*, 56/3, pp. 347-68.
- Smith, B. H.(1990) *More Than Altruism: The Politics of Private Foreign Ai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 Press.
- Sperling, V.(1999) *Organizing Women in Contemporary Russia: Engendering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undstrom, L. M.(2002) "Foreign Assistance, International Norms and NGO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Russian Campa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 Spring, pp. 419-449.
- Taylor, B. D.(2006) "Law Enforcement and Civil Society of Russia," *Europe-Asia Studies*, 58/2, pp. 193-213.
- Uhlir, A.(2006) *Post-Soviet Civil Society: Democratization in Russia and the Baltic States*, London: Routledge.
- Urban, M. (1992) "Boris El'tsin, Democratic Russia and the Campaign for the Russian Presidency," *Soviet Studies*, 44/2, pp. 187-207.
- Vorontsova, L. M. and S. B. Filatov(1997) "The Russian Way and Civil Society," *Russian Social Science Review*, 38/3, pp. 16-31.
- Weinthal, E.(2002) *State Making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Li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Central Asia*, Cambridge, M.A.: MIT Press.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pp. 151-208.
- Zaslavskaya, T. I.(2006)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Sociological Research*, 45/4, pp. 6-53.

**Abstract****The Transformation of Russian Civil Society: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Neoliberal World Economy  
and the Authoritarian State****Chung, Jaewon**

In general, civil society is defined as the sphere situated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which can serve as a promoter of democratic values, provide models of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temper the power of the state. And after the fall of socialist system, some scholars of democratic transitions became to regard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factor of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however,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became central to a new vision of development that was driven by beliefs organized around the twin poles of neoliberal economics and liberal democratic theory. The goals, agendas, and projects of NGOs that had received assistance from Western organizations had shifted over time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West and (neo)liberal values rather than domestic needs. The neoliberal ideology, driven by the West, on the one hand, have made Russian civil society to be subordinated to it, and on the other hand, have given Russian authoritarian state the pretext to surpass on civil society. Russian authorities were constructing hybrid system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in which independent civic organizations have been allowed to exist, but where they compete with state-sponsored groups on a highly unequal basis. Nevertheless, despite the Kremlin's encroachments upon the existing domains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grassroots movements that have been formed and financed domestically rapidly multiply in numbers and entrench their positions across the country. These organizations are prepared to face the state in defense of their interests.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3. 10. 25
논문심사일:	2013. 11. 1 ~ 12. 3
심사완료일:	2013. 12. 4